

제5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발 표 2.

## 한국 협동조합운동과 국가, 지역

박 승 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연합회 대표

# 한국 협동조합운동과 국가, 지역

박승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

## 1. 관제 협동조합

대부분의 제3세계에서 협동조합은 관제 협동조합이었다. 식민모국은 식민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치기구로서 주로 농업협동조합을 관제 어용 조직으로 만들어 이용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 또한 개발독재 체제를 선택했고, 마찬가지로 주로 농업협동조합을 농민 통제 기구로서 관제 어용조직으로 활용했다.

한국의 농협 또한 박정희 군사독재 정부가 만든 관제 협동조합이었다. 1961년 8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기존의 농협과 농업은행을 강제로 통합하여 종합 농협을 만들었다. 군사쿠데타 세력은 단위조합과 시군조합, 중앙회 임직원을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농민을 감시하고 착취하던 총독부 관제조직이었던 금융조합과 식산계, 산업조합, 대한농회에서 일하던 친일 부역자들을 임명해 채워 넣었다. 이는 군사정부의 종합농협 설립 목적이 일제와 똑같이 농민 통제와 수탈이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한다.

일제 치하의 농협운동은 1907년의 지방금융조합을 필두로 이후 동경 유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협동조합운동사(協同組合運動社), 천도교의 조선농민사, 기독교의 농촌협동조합 등에 의해 전국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져 갔다. 식민지 시대 농협운동은 식민지 예속 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선인들 스스로 벌인 경제 자립운동이었으며 민족운동이었다. 당연히 일제의 극심한 탄압 아래 1930년대 중반부터는 해산되고 말았고 협동조합 운동의 이념과 운동 흐름은 지하로 잠복할 수밖에 없었다.

해방 이후 협동조합운동은 주로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의 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통해 전개되었다. 우익인 대한독립농민총연맹 또한 협동조합운동사의 중심인물이었던 전진한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농민후생조합을 조직하는 등 활발하게 협동조합 운동을 벌였을 정도이다. 새로운 국가 건설의 희망 속에서 자유인들의 결사체로서의 협동조합운동이 남과 북 모두에서 우후죽순으로 솟아올랐던 것은 토지개혁과 함께 그만큼 농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농협은 국가가 임원을 임명하지는 않고 있다. 조합원 선거로 임원을 선출하는 민선 농업협동조합 형식을 띄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 회장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임명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일부 지역농협을 제외하고는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농민의 고혈을 빨아 배를 채우는 흡혈귀 임직원들의 협동조합으로 전락해 있다.

## **2. 문제는 내면화된 부국강병과 국가주의이다**

### **- 국가주의와 협동조합운동**

국가는 태생부터 늘 국가주의로 치닫는 경향을 유전자로 갖고 있다. 국가는 국가 교육 기관을 통해 국가주의를 어릴 적부터 인민들에게 세뇌시킨다. 국가와 국가주의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공무원은 인민의 공복이고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고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라는 환상과 망상을 심어놓는다. 자본주의 국가이건 사회주의 국가건 이 점에서는 동일하다. 파시즘과 구소련, 북한 등의 전체주의 국가들이 부국강병을 내세우면서 강력한 중앙집중의 권력 국가로 나아가 결국 수많은 자립자치의 협동조합을 분쇄하고 그 자리를 어용 협동조합으로 대체한 것은 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1917년 러시아혁명은 사실 협동조합운동을 기반으로 일어난 혁명이었다. 당시 협동조합 조합원은 30~50%로 추정되고, 미르 공동

체의 농민들을 합하면 러시아 인민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다. 그런데 네프 정책은 이런 협동조합을 없애고 국가가 권력을 쥐고 경제 성장과 개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강제동원형 국가경제로 나아가고 말았다. 북한 역시 이런 소련식 국가경제 체제로 나아가고 말았다.

한국의 국가는 남북 공히 일본제국주의 국가의 강한 국가주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게다가 한국전쟁 이후 남북대결 상황은 국가 이외 시민사회와 풀뿌리 공동체를 불온시하고 아예 싹을 잘랐다. 유격대국가, 병영국가는 이런 국가의 표현이다. 부국강병의 국가주의는 자립자치의 민간 영역을 암세포처럼 자르려 한다. 사실 국가야말로 시시때때로 암세포로 돌변하는데 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늘 협동조합운동에 개입 통치하려 했다. 한국의 신협운동 역사는 바로 이같은 국가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 한국의 신용협동조합운동은 부산의 성가신용조합과 서울 가톨릭중앙신용조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 신협운동의 산파였던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와 장대익 신부는 서로 일면식도 없었지만 캐나다의 안티고니시운동을 모델로 인민의 경제 자립운동으로서 신협운동을 시작했다.

안티고니시운동은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의 읍 단위 마을인 안티고니시 지역에서 일어난 협동조합운동을 말한다. 1929년 대공황의 여파로 심각한 불황이 밀어닥쳤을 때, 많은 주민들이 도시로 떠나고 인구는 줄었다. 당시 프랜시스 세이비어 대학의 코디 교수와 톰킨스 교수는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교육과 활동가 양성을 시작으로 안티고니시를 협동조합의 도시로 성장시켰다. 그 결과 안티고니시를 비롯한 노바스코샤 지역은 캐나다의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탈바꿈 되었다. 오늘날에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나 이탈리아의 볼로냐 협동조합이 한국에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1950년대의 협동조합 모델은 안티고니시 협동조합운동이었다.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는 1957년 12월 프랜시스 세이비어 대학에서 2개월 동안 안티고니시운동에 대해 공부하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1959년 2월 부산 메리놀 수녀회에서 한국에서의 협동조합 방법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운크라 고문 3명과 주한봉사단체협의회(KAVA) 회원 등 18명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한다. 농촌사목을 주로 하던 장대익 신부 또한 1957년 9월부터 1년 동안 프랜시스 세이비어 대학에 유학을 가 신용협동조합운동에 대해 배웠다. 귀국 후에는 서울교구의 후원으로 1959년 8월 소공동에 사무실을 열어 서울교구와 인천교구 신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소개와 교육 활동을 계속했다. 이때 장 신부가 서울 지역 천주교 신자들이 스스로 조직한 협동경제연구회 사람들을 만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협동경제연구회는 평양교구 소속의 월남 신도들이 신용조합을 빈곤 타개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연구 소개하기 위해 1959년 11월 20일 만든 모임이었다.

이처럼 한국의 신협은 불특정 대중을 상대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서로 잘 알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가톨릭 신자들을 중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상호부조하는 조합’이라는 신협의 공동유대 정신 아래 출범했던 것이다. 1960년대 신협의 대부 금리는 연 1.5~3%였다. 당시 가장 중요한 담보는 대부받는 사람의 ‘정직성과 좋은 인격’이었다. 대출금은 반드시 지정 용도로만 써야 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되빌려 주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대부금 용도가 고리채 정리, 가옥 수리, 자녀 학자금, 전세금 마련 등이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신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름아닌 고리채 정리였다. 신협은 이 고리채 정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되기까지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계 신협 지도자들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합 활동에 헌신했던 초기 신용협동조합운동 활동가들의 노력이야말로 신협운동의 성장을 이끈 밑거름이었다. 당시 이사회는 물론 회계와 서기 등 모든 임직원

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한국 신용협동조합의 오늘도 없었다.

1972년 신협법의 제정과 함께 순수 민간 자율 결사체였던 신용조합은 신용협동조합이라는 법인으로 바뀌게 된다. 정확히 법 제정 이후부터 한국의 신협운동은 정부의 관리 통제 기도에 맞서 끊임없이 자율성을 지키고자 하는 저항 운동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신용협동조합법과 법인격은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국가의 지배 개입과 관리감독 수단이라는 점에서 특히나 인민의 자율과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협동조합운동에서는 양날의 칼이다.

신협법 제정과 동시에 당시 재무부는 정관 제정과 개정, 인가 기준부터 업무영역, 이자율, 등기, 각종 세금문제까지 행정명령인 ‘지침’을 제시하면서 신협을 통제하려고 했다. 1973년 3월 24일 서강대에서 277개 조합의 대의원이 참석해서 신협연합회가 창립되었는데, 이때 연합회 회장을 외부인사로 영입하자는 주장과 순수 신협인이 신협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틀 동안 논쟁한 것도 자율과 독립,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78년 당시 박정희 유신정권은 영등포산선 신협에 대해 신협법에 따른 감사권한을 이용하여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아예 해산 명령을 내려버린다. 국가가 협동조합을 해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영등포산선 신협은 다람쥐회를 조직하여 신협운동의 초기로 돌아가 그야말로 순수 민간 결사체로서의 상부상조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중이다.

신협법 제정 이후 10여년이 지난 1983년에 성립신협 8억 7백만원, 신정신협 10억 2,400만 원 규모의 내부자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연합회 본부와 서울지부에서도 회계 사고가 발생하였다. 심지어 연합회관 구매과정의 부정 사건까지 불거져 나왔다. 위장대출, 예탁금 횡령, 부외거래, 조합명의 당좌발행, 상호보증대출

등 이사장의 전횡과 임직원들의 방조, 조합원 의식 결여가 뒤엉켜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같은 대형사고는 1980년대 들어 한국에도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정책, 이른바 규모화, 합리화 정책을 취하면서 조합이 대규모화되고 조합원 교육이 경시되기 시작하면서 협동조합 이념이 상실되는 현상과 동전의 양면으로 터져나온 일종의 협동조합 정체성 일탈의 결과물이었다.

회계부정 사고는 곧바로 재무부와 은행감독권의 감사에 뒤이은 정부 감독의 강화를 불러온다. 결정적인 사고는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1997년 국제통화기금 사태에서 터지고 만다. 1997년 8월 조합원 수 500만 명 돌파에 1,700여 개에 육박하던 한국의 신용협동조합들은 그 직후 몰아닥친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 아래 수많은 신탁이 망해서 문을 닫고 말았다. 이른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간신히 목숨을 건진 신탁들은 이후 더더욱 제2금융권 기관으로 제도화되고 말았다.

현재 한국의 신탁은 협동조합의 생명인 자율과 자치, 자립의 정체성은 짝 옥죄어 숨을 못쉬고, 국가의 통제에 길들여진 관제 협동조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되찾는 신탁의 독립운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 **3. 빼앗긴 인민주권을 탈환하는 운동, 협동조합운동**

#### **- 국가와 민주주의, 지역공동체**

오늘날 민주주의는 어떤 용례로 사용되건 그 본질이 인민주권이라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는다. 인민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주권 재민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처럼 주의(이즘ism)가 아니라 인민(데모스)의 통치(크라시), 즉 왕이나 대통령이나 기타 다른 권력자가 아니라 인민이 스스로 자신을 통치하는 체제를 말한다. 인민이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당연히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행사하고 입법, 사법, 행정의 일꾼들을 인민들이 직접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눈치를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행정부 공무원과 경찰의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면 당연히 이들은 대통령에게 충성하게 된다. 아무리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규정하고 공무원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에 명시해 놓아도 말짱 헛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대통령의 몽둥이이고 인민들을 물어뜯는 대통령의 충견들이다.

현대 국민국가에서는 대체로 인민의 주권을 선거 절차를 통해 위임하는 위임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도 입법권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의원에게, 행정권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4년 내지 5년마다 한 번 치르는 선거를 통해 위임해 준다. 그리고 이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과 대통령, 도지사, 시장은 4, 5년 동안 입법권과 행정권의 전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법권은 위임 절차도 없이 사법 관료가 독점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인민의 사법 주권은 인민도 모르게 강탈당한 채 사법 관료 독재의 상태가 반세기 넘게 지속돼 오고 있는 셈이다. 법전만 달달달 외워 고시에 합격하고 나면 그때부터 출세가 보장된 사법 관료로서 인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한국의 사법 제도이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법 권력은 거의 제동 장치도 없어 수많은 민주주의 관련 판결도 사법 관료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전혀 상반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라는 말로 표현되는 사법 관료의 부패와 부정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이 모든 일이 인민 주권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사법 주권을 인민들이 강탈당한 결과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인민들의 사법주권을 강탈해간 도둑은 다름아닌 미군정이다. 해방 후 남한을 점령한 미국은 일제 총독부를 이어받아 미군정을 실시했고, 이 때 남한을 점



령 통치하는 데 일제 식민지 관료를 그대로 재등용했다. 미군은 조선인을 자치 능력이 없는 미개한 민족으로 적대시하고, 비록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일본인을 문명인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남한 인민을 강력하게 통치하려고 사법 주권을 남한 인민에게 주는 제도는 배제하고 강력한 경찰과 검찰을 통한 통치 체제를 만들었다. 다시 권력을 쥐게 된 친일 민족반역자들은, 특히 사법 권력을 인민에게 돌려주는 따위의 헌법 절차는 아예 무시해 버리고 말았다. 바이마르 헌법을 전범으로 미국의 사법 체계를 도입해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이 인민의 사법 주권을 위임 절차조차 없이 사법 관료에게 넘겨준 것은 이처럼 당시 미군정이라는 해방 이후의 정치경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중앙 정부 권력은 비대할 대로 비대해져 권력이 인민에게 있다는 것을 망각한 암세포 권력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한국에서 선거는 요식 행위일 뿐이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소비에트연방의 특권 지배 계급이었던 노멘클라투라와 똑같이 임기가 보장된 특권 관료 계급이다. 입법부 권력은 그나마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교체되기라도 하고 적어도 4년에 하루는 인민들을 상전으로 모셔야 한다. 그러나 막강한 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한국의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세무서 등을 보면 이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대통령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 아니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레임덕이 다가오면 얼마든지 대통령을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이들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다. 결국 이들이야말로 퇴임한 대통령을 비극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범죄자들에 다름아니다.

인민의 권력을 탈취해간 이들 권력 찬탈자들에게서 인민의 권력을 되찾아 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실현의 첫걸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면 인민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국가냐 하는 기준은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하는 협소한 제도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지방 자치, 지역 공동체의 자치가

과연 존재하느냐에 있다.

국가는 지방의 연합, 즉 연방으로서 필요한 만큼만 권력이 주어지면 되고 기초 공동체의 권력은 가능한 만큼 권력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민의 직접 정치, 직접 민주주의가 실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절대로 3권 분립, 선거, 대의제 같은 몇 가지 제도가 아니다. 4년마다 한 번 주인이 되는, 그것도 제대로 된 주인이 아니라 대규모 언론 매체의 조작된 이미지에 따라 수동의 객체로서 참여하는 선거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사실상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며 민주주의라는 환상일 뿐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민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와 이를 가능케 하는 지역 공동체이다.

민주주의의 근거지는 성숙한 시민 의식 같은 추상의 정신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거지는 또한 좋은 대통령이나 좋은 정부, 즉 국가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근거지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립 자치의 공동체이다.

공동체를 강조하다 보면 흔히 집단주의, 전체주의를 용인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한다. 사실 공동체가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고 전체주의 질서나 엘리트 독재 질서에 갇히게 될 위험성은 늘 있다. 그러나 지역 자치 공동체와 국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지역 공동체는 철저한 자유인들의 연합체이다. 에너지-식량을 자립하는 자치 공동체는 국가와 달리 그 규모가 지역으로 국한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는 공동체란 국가의 신분제나 계급제의 강한 억압 아래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등이 없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자치 공동체도 아니다. 자유가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며 자치 공동체도 아니다. 평등과 자유가 없다면 공동체는 감옥일 뿐이다.

경찰과 군대, 공무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그만큼 세금이 적어지고 인민의 생활은 더 나아진다. 사실 경찰, 군대, 공무원 같은 제도보다 더 좋은 것은 인민 스스로의 지역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여기로부터 비롯된 애국심 그리고 인민 스스로의 질서와 통제, 자립 자치이다. 스위스의 예를 들 것도 없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은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공동체 자체의 자원봉사로 충분히 가능하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민주주의의 실현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가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투철한 민주주의자들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민주주의의 실현 주체는 인민이며,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은 인민들의 자치가 실현되는 지역 공동체이다.

협동조합운동은 이렇게 빼앗긴 인민주권을 탈환하는 인민들 스스로의 민주주의 탈환운동이다. 협동조합이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말해지는 이 때문이다.

#### **4. 협동조합의 정치와 국가**

단순히 협동조합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율과 자치, 자립의 협동조합운동에 머물러서는 협동조합운동의 정체성을 지속가능하게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국가는 언제든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히틀러와 스탈린을 키워낸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정치화되지 않으면 협동조합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파시즘 당시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협동조합도 몰락하고 만 것은 우리들의 가까운 미래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가 만든 관제 협동조합을 비판하기에 앞서 협동조합운동은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이 만든 국가, 즉 국가 자체를 공동체가 통제할 수 있는 공동체 국가로 만드는 정치운동을 해야만 한다. 국가를 협동과 상생의 협동조합 국가로 만들어야만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운동은 지속가능해 진다.

한국의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 진보정치 운동은 그동안 지역공

동체의 재조직이란 범주와 의제가 없었다. 한국의 진보운동과 민주화운동은 늘 국가권력의 민주화에 멈춰 서 있었고, 시민사회운동 또한 마찬가지였다. 최근의 복지국가 논쟁이나, 재벌을 활용해야 한다는 등 기가 막히는 재벌 논쟁을 보라.

이것은 생협운동도 마찬가지이다. 협동조합간 협동, 지역사회 기여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서 보면 바로 이웃에 매장을 내 경쟁을 하는 생협의 행태는 협동조합들끼리 협동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경제 사회 문화적 역할이라는 점에서 보면 어처구니없는 짓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경쟁을 소비자주권론이나 생협의 성장이란 이름으로 합리화한다면 이는 자해의 논리나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협동조합운동은 국가주의에 찌들어 있는 한국 사회를 밑바닥에서부터 바꾸는 변화와 전환의 운동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운동은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의 생활세계를 국가와 자본의 지배 종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운동이다. 협동조합 경제는 지속가능한 풀뿌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자립자치의 지역공동체 협동사회 경제를 건설하는 운동이다. 또한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권력을 풀뿌리 지역주민들이 탈환하는 운동이다.

그동안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은 국가 중심의 정당운동이었다.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총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서울에서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정당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중앙당이 창당되고 그리고 이어 지구당이 창당되면서 술한 정치 지망생들이 입후보하는 통로로써 활용되고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 흩어지는, 그런 한국 정당정치의 상투적인 반복이 지금도 되풀이해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기존 보수정당보다 더 귀족화하고 기득권화된 진보정당이 권력의 떡고물을 놓고 추잡하고도 역겹기 그지없는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국가주의 정당정치, 포말정당과는 전혀 다르게 풀뿌리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지역정치운동이 협동조합운동의 정

치이다. 이것은 서구의 정당정치, 녹색당의 정치운동과도 전혀 결이 다른 성격의 정치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서구에서는 6.8혁명 이후에 대체로 이전의 구 사회운동과 전혀 다르게 신 사회운동이 대두된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6월 항쟁 이후에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운동이 반핵과 골프장 반대, 공해추방운동에 동의하고 함께 해왔다.

한국의 풀뿌리 지역정치운동은 최소한 반핵을 중심으로 한 녹색의 생태가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인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다시 탈환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풀뿌리 직접민주주의 가치, 국가 복지를 포함하되 공동체 가치를 우선하는 공동체복지 가치, 그리고 남북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 질서를 모색하는 평화의 가치 등등 녹색, 풀뿌리 민주, 공동체 복지,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지역에서 함께 하는, 협동과 연대와 상생의 지역정치운동이다.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운동,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는 대체로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역사와 문화가 존재했다. 이런 최소 강령에 동의하고 실천한다면, 넓게 보아 녹색의 생태 환경운동을 해왔던 사람들, 시민사회운동을 해왔던 사람들, 주민운동을 해왔던 사람들, 풀뿌리 지역운동을 해왔던 사람들, 귀농한 사람들,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 등등 국가주의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일으키며 저항해 왔던 사람들 거의 모두를 포괄하면서 지역의 협동사회경제 세력은 지역정치운동의 지역정당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부터 빼앗긴 인민주권을 탈환해야만 국가를 진정한 주권재민의 공동체 국가, 지역의 연합으로서의 연방주의 국가로 변화시킬 수 있다. 물론 서울도 지역이다. 이렇게 해야만 경쟁과 전쟁의 가치가 아닌 협동과 우애, 평화의 가치를 밑바닥 지역의 인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가치로 받아드릴 수 있으며, 그때부터 인민들 스스로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